

# 한반도 정세변화와 운동진영의 대응

김창수

자주평화통일촉진의 정책실장

## 1. 통일운동의 흐름

80년대 말부터 민간통일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서 사회적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연방제 통일, 평화협정 체결, 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에 대한 관성적인 주장은 80년대만큼 국민적인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90년대 중반 이후의 상황은 80년대와는 달라서, 통일열망을 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의 의식에 자리잡은 핵심적인 문제의식이 아니다. 오히려 통일은 가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가 불안정해서 통일과정에서 남한의 부담이 너무 클 것 같다는 것이 국민들의 머리 속에 자리잡은 핵심적인 문제의식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국민들의 의식은 정권안보용 이데올로기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90년대 중반부터 통일운동은 운동 주체의 측면에서 재야·종교·시민단체로 확산되고, 북한동포돕기 운동을 계기로 통일운동이 폭넓게 확산되었다. 이와 같은 운동주체의 다원화를 반영하여 정치군사문제에서 사회문화·경제협력 등의 영역으로 다양화되었다.



주변 강대국들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협력자로 이끌어내기 위한 지혜로운 노력이 필요했다. 이것이 지금 시기의 '민족 자주'가 가지는 의미다.

## 2. 분단관리론과 '북한 민주화론'에 대한 비판

한편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는 견해들이 90년대 말부터 새롭게 등장했다. 대표적인 것이 '분단관리론'과 '북한 민주화론'이다.

'분단관리론' 또는 영구분단이 평화통일이라는 '영구분단론'은 '하나가 되는 것이 통일'이라는 이른바 '조국은 하나다' 식의 통일론에 대한 비판과 대안제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국은 하나다'라는 주장은 공존공영하는 통일관을 확산시켰다고 보다는 '하나가 되는 것이 통일'이라는 정서를 가지고 통일에

대한 일체감을 만들어냈다. 국민들은 은연중에 통일은 하루아침에 정치·경제·군사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분단관리론'은 통일을 역사발전 과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칫 분단의 영구화만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분단관리론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속담이 말하는 것과 같은 소극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진다. 또한 통일국가의 발전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부재하다는 소극성도 보인다.

한편, 북한 민주화론은 과거에 주체사상에 심취해서 북한 체제와 판권을 가져왔던 젊은 층에서 제시하는 주장이다. 북

한 민주화론은 현재 북한의 위기는 구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북한 체제를 연착륙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북한은 김정일 일인독재 체제이므로 김정일 정권을 타도하는 것이 북한 인민들을 해방시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북한 민주화론에 대한 비판은 북한을 화해협력의 대상으로 보고 끊임없이 대화와 접촉을 증대시키는 것이 민족의 번영을 가져온다는 시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북한을 다루는 방법을 분리시켜서 북한 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는 정확하게 인식하되, 즉자적으로 대처해서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으므로 대화와 접촉을 증대시켜서 북한체제의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 주요한 논거다.

### 3. 정상회담과 자주의 원칙

남북정상회담은 동아시아 정세에 큰 변화를 줄 것이다. 이미 변화의 조짐은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 2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중국을 방문하였다.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방문은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의 정책이 크게 변할 것을 암시해주는 사건이다. 중국의 영향력이 급증하게 될 경우 미국이 대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주변 강대국들의 국가원수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회주의 붕

괴로 80년대 말에 탈냉전이 시작됐다. 이와 달리 동북아시아에서 탈냉전의 실질서는 중국, 북한 사회주의 국가가 견재한 상태에서 서서히 시작하고 있다. 남북은 그 역사의 물결 한 가운데에서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 강대국들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협력자로 이끌어내기 위한 지혜로운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지금 시기의 '민족 자주'가 가지는 의미다.

정상회담이 동아시아 질서 변화의 출발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밝힌 1항 '자주' 원칙의 의미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남북은 1972년에 발표한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통일 원칙을 합의하였다. 이후 1991년의 남북 기본합의서를 비롯해서 남북 사이에서 통일문제를 논의할 때 자주 문제는 빠지지 않았다. 남쪽 사회에서 민족대단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대체로 자주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점이 모아졌다.

이번 6.15 남북공동선언의 1항도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문맥으로 볼 때,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밝힌 자주 원칙과 이번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밝힌 자주 원칙은 의미가 좀 달라 보인다. 7.4 성명에서는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할 것을 약속했다. 6.15 공동선언에서는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할 것을 말하고 있

다. 7.4성명에서 밝힌 자주의 원칙이 외세 배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6.15 공동선언은 민족의 단합과 공조에 무게가 실렸다.

한반도 문제에는 역사적으로 주변 열강들의 입김이 거셌다. 구한말에도 그랬고, 1945년 이후 해방공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반도가 외세의 각축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민족 자주는 외세의 간섭 배제를 뜻하지만,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주변 열강들이 남북 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앞으로 남북의 화해와 통일에 협력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정상회담을 전후로 해서 변화하는 동아시아 정세에 대비하는 것은 통일운동의 큰 과제가 된다.

#### 4. 정상회담과 평화운동

통일운동이 이와 같은 자주의 원칙에 따라서 통일을 위한 민족의 단합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화운동의 관점에서 통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평화운동의 입장에서 통일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평화운동은 한반도 통일의 객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분단이 지속된 밑바탕에는 남북한의 군사적 대결이 자리잡고 있다. 평화운동은 군사주의를 완화시켜서 통일의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둘째, 평화운동은 통일운동에 세계적인 보편성을 부여하고 국제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운동이다. 그 동안 한반도에서 진행되는 통일운동은 민족주의적인 경향을 보여서 이것이 세계평화를 위한 보편성과 거리감을 갖게 된 것도 사실이다.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세계평화 단체들이 바라보는 보편적인 평화의 문제로 접근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이 아시아 평화와 직결되어 있다는 시각을 갖는 것은 통일을 위한 국제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 평화운동은 통일과정을 준비하는 운동이다.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 내부의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북이 공존해서 살 수 있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 통일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통일이기 때문이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한 준비가 없이 맞이하는 통일은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평화운동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관용의 덕목을 키우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소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남북의 사람 사이에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이 오랫동안 각각의 체제에 익숙해져 있는 것들을 서로 용납하고 관용하는 일이다. 평화교육은 통일과정을 준비하기 위한 기초교육이다.

넷째, 평화운동은 통일 과정을 평화적으로 이끄는 운동이다. 1990년에 합의에 의해서 통일을 이룬 남북 예멘이 1994년에 다시 내전상태로 돌입한 것은 통일과

정을 평화적으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1990년 남북 예멘 수뇌의 서명 날인으로 성립된 예멘 통일이 정치적 통합 과정의 시작일 뿐, 그것이 곧 정치적 통합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남북 예멘은 일단 합쳐지기는 하였지만, 완전히 통합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두 정치체제가 이면에서 제각기 권력을 유지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책동하였던 것이다. 양측은 말로만 군 통합을 역설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각기 독자적인 군사능력의 비축과 외국의 지지 세력 확보를 꾀하였다는 사실에서 통일과정을 평화적으로 이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주고 있다.

## 5. 남북 정상회담과 통일운동의 대응방향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서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통일운동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서 앞으로 통일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측과 대화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815 통일행사 등을 북측과 공동으로 개최한다면 대화창구 마련의 단초가 형성될 것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멘의 사례를 교훈 삼아서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정당 사회단체 공동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온 겨레가 통일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통일세력들의 연대를 실현할 수 있는 조직체의 결성이 필요하다. 이런 조직은 1994년에 민족회의가 결성될 때의 취지와 정신을 복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남북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넷째, 민족화해협력시대가 열리고 있으므로 통일교육, 평화교육을 통해서 사회내부의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다섯째, 정상회담 이후 변화하는 현실을 고려해서 법·제도의 정비를 요구해야 한다. ◆